

SOC투자 미룰 수 없다

(2006. 6. 14)

건설업계의 SOC 등 공공건설 투자예산의 확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잇단 고강도 부동산 시장 안정정책에다 몇년째 계속되고 있는 공공건설 투자예산의 축소기조로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는 기획예산처 등 정부부처와 5당 대표들에게 내년도 공공건설 투자예산의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투자가 집중됐던 SOC 분야는 최근 사회복지 및 국방예산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19.1%에 달했던 SOC 예산 증가율은 이후 2003년까지 8.3%로 둔화됐고 2005년까지는 오히려 1.9%가 감소했다. 정부 재정운용에서 교육, 복지, 국방부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SOC 등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경우 장래 국가의 성장 잠재력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SOC 투자는 실제 시설운영까지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걸리는 중장기 프로젝트이므로 투자시기를 놓칠 경우 국가경쟁력에 결정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05~2009년 국가 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연평균 예산증가율이 복지, 보건 9.2%, 국방 9.1%, 환경보호 7.7%인데 반해 SOC 부문은 1.3%에 불과하다.

수십兆 PF 자금이 놓고 있다

(2006. 6. 17)

수십조원에 달하는 은행과 연기금 등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Project Financing) 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금고에 방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각종 민간투자사업의 조기시행 및 SOC사업 확대 등 국내 PF 시장의 활성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만 해도 연간 10%를 상회하던 기업설비 및

투자증가율이 올 1분기에는 6.9%로 급감하면서 PF 시장 규모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최근 금융기관들은 막대한 PF자금의 투자처를 찾기 위해 국내가 아닌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의 강경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고 정부의 민간투자사업도 예상에 못미치는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은행과 연기금, 공제회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각기 막대한 PF자금을 쌓아놓고 있지만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썩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그나마 정부가 작년부터 임대형 민자사업(BTL:Build Transfer Lease) 등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작년 사업은 물론 올해 사업도 그 추진경과가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실제로 PF투자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잠자고 있는 PF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반기 부동산 경기 위축 전망

(2006. 6. 26)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이 내놓은 「부동산 시장 전망 실사지수(RESI)」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는 앞으로 3개월간 주택과 토지매매가격 뿐만 아니라 거래량 또한 모두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매매가격지수는 81.3으로 한달전에 비해 19.9P 떨어졌다. 토지매매가격지수는 77.4로 전월에 비해 21.7P 하락, 주택매매가격지수의 낙폭보다 컸다. 주택도시연구원의 RESI는 부동산전문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향후 3개월 동안의 주택·토지의 가격변동 여부를 조사, 이를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지수인 100을 밑돌 경우 전문가집단의 가격하락 전망이 우세한 것을 의미한다. 주택도시연구원은 이같은 하반기 부동산 경기악화가 금리인상과 부동산세제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이같은 전망은 한국은행의 정

책금리 추가인하 가능성, 재산세와 증부세 등 보유세의 대폭 인상부과, 투자부진과 고유가 등에 의한 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 기대 못미칠 듯

(2006. 6. 28)

올 하반기 건설투자는 상반기에 비해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전체 경제성장률에는 한참 못미쳐 본격적 건설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각 연구기관에 따르면 올 하반기 중 건설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올 상반기 건설투자가 성장이 감소되거나 0.1~0.5%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잠정 집계된 것에 비하면 소폭 확대된 것이지만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전체 경제성장률을 4%대로 예상한 것을 고려하면 당분간 건설경기는 침체를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한편 상반기에 감소세를 나타냈던 건설수주도 하반기에 증가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 2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18.4%의 감소세를 보인 건설수주가 3분기 4.4%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전년동기의 부진에 따른 상대적 반등효과로 실제로는 2004년 수준에도 못미칠 것”이라며 “최저 낙찰제의 확대 등으로 실제 공사물량을 확보한 업체마저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등 경영환경 악화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다핵연계형 구조개편

(2006. 6. 30)

건설교통부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개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2006~2020)」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공간구조를 서울 중심의 일극구조에서 통근권과 생활권, 역사성 등을 고려해 10개 안팎의 자

립적 도시권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인천-부천-김포권, 수원-화성권, 성남-용인권, 안양-군포-의왕권, 남양주-구리권, 평택-안성권, 의정부-양주-동두천권, 안산-시흥권, 파주-고양권, 이천-광주-여주권 등이 다핵구조의 핵심이다. 교통체계는 서울에서 퍼져나가는 방사형에서 환상격자형 교통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별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조상한치를 제시하고 지자체가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해 인구증가를 억제하기로 했으며 도시개발 등 관리방식도 이 체계에 맞춰 시행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수도권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제도개선안 마련에 착수하고 내년에 확정, 2008년에는 법령개정작업에 나설 예정이며 2010년 이후부터 이 방안에 따라 수도권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경기 하반기도 빨간불

(2006. 7. 5)

한국은행은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 하반기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4.4%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GDP 성장률은 5.0%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축회복 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1.6% 증가(상반기 0.3% 증가)에 머물러 연간 성장률이 1.0%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 재건축개발부담금,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 각종 부동산 정책의 시행이 하반기에 몰려 있어 건설투자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부동산가격이 정부대책 효과로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규제완화 기대심리 등에 따른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소비는 고용사정의 완만한 개선, 가계신용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다소 약화돼 연간 4.4%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국내 기계수주 등 선행지표의 호조, 서비

스업의 신장세 등에 힘입어 연간 6.3%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수도권 레미콘 출하 저조 (2006. 7. 10)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외 상반기 레미콘 출하실적이 건설경기 침체로 보합세에 그쳤다. 특히 민수부문의 수요는 작년 수준에 머문 반면 관수용은 17%나 감소하면서 공공건설시장의 부진을 그대로 반영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동안 수도권의 117개 업체 186개 공장에서 공급한 레미콘은 모두 2,353만³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8%, 19만 5,000³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부문별로는 민수용이 2,134만³로 작년보다 3.2%, 66만 4,000³ 증가한 반면 관수용은 219만 5,000³로 무려 17.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레미콘 출하가 이처럼 부진한 것은 주거용 아파트를 비롯한 민간 건축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요유발이 기대됐던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김포, 고양 등의 아파트 분양이 미뤄진 것이 수요감소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의 레미콘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특별한 호재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적어도 내달까지는 현재와 같이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경기 부진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규제정책이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 상태로 가다가는 연말 쯤 문을 닫는 공장이 속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0층 이상 초고층 서두르자 (2006. 7. 12)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토지이용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 시내의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 건설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은 건축, 교통, 도시계획, 환경부문의

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10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3.7%(59명)가 초고층 건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의 93.2%는 업무용으로, 나머지 6.8%는 주거용으로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업무용으로 초고층 건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시이미지 제고와 상징성 강화(46.1%), 토지이용의 효율성 향상(27.6%), 관광명소로서의 기능 부각(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거용으로 초고층 건물이 필요한 이유로는 토지이용 효율성 향상(44.5%), 직주 근접에 따른 이동과 생활의 편의성 제고(33.4%) 등으로 응답했다. 반면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0.9%가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34.1%가 일조권 침해 등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11.4%가 화재 등에 관한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송파신도시 개발, 궤도 올랐다 (2006. 7. 21)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송파구 거여동과 장지동, 성남시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 등 205만평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중대형 아파트 2만가구 등 총 46,0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서며 2009년부터 일반에 공급된다. 주택 형태별로는 단독주택, 800가구, 연립 200가구, 전용면적 85² 이하 23,100가구, 85² 초과 21,900가구 등이며 내년말까지 개발계획을 완료하고 2008년에는 실시계획을 수립, 2009년 단지 조성과 함께 분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송파신도시를 미래형 웰빙 주거도시, 자연과 어우러지는 환경 및 커뮤니티 도시, 녹색교통·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건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하수처리장 등 기피시설은 지하에 건설되며 지구내 소구릉지 및 하천이 보전된다. 광역교통대책으로는 지하철 8호선 역사를 신설하고 주변도로 7개 노선 10.6km를 건설

하기로 했다.

주택건설 목표달성 '산너머 산'

(2006. 7. 29)

올해 정부가 내놓은 주택 52만가구 건설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건교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주택건설실적은 지난해 동기(19만 2,000가구) 대비 5.3% 줄어든 18만 1,000가구에 그쳤다. 올해 5월말 누계 주택건설실적은 전년대비 12.8%나 감소했지만 6월 한달 동안의 주택 인허가 물량이 50.1%나 급증한 덕분에 상반기 건설실적의 급락 사례를 피할 수 있었다는게 건교부 분석이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올해초 정부가 발표한 주택 52만가구 건설계획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을 고려할 때 지난 1998년(30만 6,000가구) 이후 처음으로 40만가구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대부분 건설사가 신규사업 물량을 줄이는 추세여서 올해 주택건설실적은 부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올해 상반기 공공택지내 건설실적은 42% 늘어난 반면 민간택지내 건설실적은 무려 18.1%나 감소했다.

레미콘 출하 지역별 편차 심해

(2006. 7. 31)

레미콘 출하가 지역별로 심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레미콘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의 715개 업체 834개 공장에서 지난 상반기 동안 건설현장에 공급한 레미콘은 모두 6,169만 2,600m³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 337만 8,800m³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는 민수용 5,065만m³, 관수용 1,104만m³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아파트 건설붐이 일고 있는 울산과 전북, 광주, 전남, 경북의 출하가 두자릿수의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부산과 제주, 대구, 경남 등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또 전국적으로 레

미콘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 경인 등 수도권과 강원, 충북, 대전, 충남 등은 소폭 증가하거나 강보합세를 보였다. 레미콘의 출하가 이처럼 지역별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파트 등 건축경기가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부산의 경우 명지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지역의 착공 지연이 주원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명지지구를 비롯해 물금지구 등 상당한 수요가 기대됐던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착공이 지연돼 전체적으로 출하가 기대치를 밑돌았다”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OC예산 축소 공기차질 심각

(2006. 8. 4)

정부의 SOC예산 축소로 신규발주가 크게 줄어든 것은 이미 착공된 공사의 공기지연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건설협회가 15개 건설업체가 운영중인 638개 SOC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예산배정 및 현장운영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의 53.9%에 달하는 344개 현장이 예산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예산이 배정돼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장은 46.1%인 294개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자기자금으로 먼저 시공한 뒤 예산이 확보되면 기성금을 받는 사전 외상공사를 하거나 공종 및 현장배치 인원을 줄여서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배정이 늦어지면서 이에 따르는 공기지연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건설사들은 외상공사 등으로 경영부담이 커진데다 지연된 공기만큼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비까지 증가해 심각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건협조사에서도 예산이 부족한 현장 40곳의 당초 올해 예산총액은 5,312억원이었으나 배정액은 절반 수준인 2,660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현장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적정 예산규모는 6,788억원으로 예산배정 비율은 39%에 불과했으며 현장별로 짧게는 1년에

서 3년까지 공기지연이 예상된다. 건협 관계자는 “SOC예산 축소로 인한 공기차질과 이에 따른 건설업계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건설경기 연착륙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SOC 예산의 적절한 배정과 집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준설토를 시멘트 원료로 활용 (2006. 8. 9)

일본의 종합화학 메이커인 도쿠야마사는 준설토를 시멘트 원료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시스템을 개발했다. 최근 야마구치현 슈난시의 도쿠야마 제조소내에서 실시한 실험은 국토교통성과 야마구치현 등의 항만관계자에게 공개됐다. 도쿠야마사는 준설토를 재활용함으로써 매립하는데 드는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동시에 해양환경보전, 수송항로 유지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 신기술은 우선 고요건설이 보유한 관로분급 시스템을 통해 준설토를 75 μ m 이상의 조립분과 그 이하의 세립분으로 나눈다. 이 세립분을 도쿠야마의 필터 프레스 플랜트(일종의 압력여과기)로 여과해 탈염한 후 고체화해 시멘트의 원료로 쓴다. 조립분도 탈염, 탈수해 골재나 해변 개량재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이 기계의 처리능력은 하루에 약 3,000 m^3 이다. 도쿠야마사는 앞으로 자사와 근거리 항로의 준설토를 재활용할 계획이며 데이터를 더 수집해 3년 이내에 실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 수해복구공사 3조 5,125억원 확정 (2006. 8. 16)

7월에 강원도와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 및 태풍의 피해를 복구하는데 총 3조 5,125억원의 중앙·지방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어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을 심의·확정했으며 이를 관계부처 및 전국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수해복구비는

국비 2조 6,741억원, 지방비 등 8,384억원으로 총 3조 5,125억원 규모이며 시·도별로는 강원도 2조 3,522억원, 경남도 5,171억원, 충북도 1,983억원 등이며 이어 경기도 1,507억원, 경북 1,092억원, 전남 843억원, 충남·기타 1,007억원 등을 지원한다. 방재청은 “피해지역별로 도로와 통신, 전기, 수도 등의 응급복구공사는 완료하였지만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 상당한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일단 복구공사 예산규모가 확정됐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당장 이번주부터 복구공사 발주 및 착공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콘크리트 기술개발 체계화 (2006. 8. 21)

앞으로 콘크리트의 품질 및 기술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최근 레미콘 기술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콘크리트의 기술과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고강도 콘크리트의 기술관리를 체계화하는 동시에 제품의 활용이 확산될수 있도록 원가분석 등의 정보를 기술자 및 수요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업계 실무담당 임원 중심으로 기술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협회 관계자는 “레미콘의 품질과 기술을 한단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 기술분과위의 활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정기회의나 비정기회의를 통해 기술·품질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탄강 유역 댐 건설한다 (2006. 8. 23)

임진강 유역의 홍수방지를 위해 한탄강에 홍수조절용 댐과 천변저류지가 건설된다. 한명숙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특별위원

회는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항구적으로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홍수조절댐과 천변저류지를 동시에 건설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홍수조절용 댐은 평상시에는 자연상태로 유지되다가 홍수때만 담수해 홍수를 조절하는 개방형 댐이며 천변저류지는 하천변에 저류지를 만들어 홍수가 최고조에 달할 때 제방을 월류시켜 홍수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정부는 특히 해당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를 의식해 “건설되는 댐은 홍수조절 기능만을 담당할 뿐 절대로 다목적 댐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댐의 규모와 위치, 착공시기, 예산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특히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로·제강슬래그 재활용 구분돼야

(2006. 8. 25)

현재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로슬래그와 제강슬래그의 재활용 용도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상원 전남대 화학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철강슬래그 재활용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교수는 제강슬래그는 철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다 물과 반응때 폐알칼리 침출수를 배출하는 만큼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이 우려되는 배수층 골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로슬래그와 제강슬래그는 지난 2003년까지 재활용 용도가 구분됐으나 2004년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시멘트 원료(혼화제, 증량제), 콘크리트용 혼화제, 규산질 비료원료 등 14개 용도로 통합됐다. 철강슬래그의 재활용 용도에 대한 새로운 기준 설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교수는 “인공어초와 해중림초, 해저환경 개선을 위한 복토, 풍쇄에 의한 세골재 제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철강슬래그의 재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용도가 14개에 묶여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활용 용도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량포장 기술 신기원 열다

(2006. 8. 28)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교량 노면포장 기술의 신기원을 열었다. 콘크리트계 교면포장 기술의 최대 약점인 높은 가격과 아스팔트계 교면포장의 최대 단점인 짧은 수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고성능 콘크리트(HPC) 교면포장 공법을 개발한 것, 이 새공법은 한국도로공사의 지식공모전 은상, 한국도로학회 기술상 등을 수상한데 이어 지난 6월 건교부 건설신기술 제495호로 지정돼 해상 장대교량에 공식적으로 적용될 기반을 마련했다. 새기술은 무기질 혼화재료, 친수성 PVA 섬유를 이용한 콘크리트 제조 기법과 고압위터젯, 슬러지 정화장치를 활용한 시공 기법이다. 삼성물산은 새제조법으로 염해피해에 맞설 수 있는 높은 내구성과 소성수축 균열에 견딜 수 있는 콘크리트 성능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 또한 분진과 산업폐기물 발생량까지 저감함으로써 최근 부상하는 친환경기술이란 특성까지 갖췄다. 관계자는 “저비용, 고효율, 장수명의 장점을 고루 갖췄기 때문에 교량길이가 긴 장대교량 일수록 신공법의 진가가 더욱 두드러진다”며 “특히 가격 절감효과는 하반기로 예고된 터키, 민자사업 수주경쟁에서 원가경쟁력 우위를 다지는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2년까지 88조원 투입,

166만 가구 건설

(2006. 9. 6)

정부는 오는 2012년을 목표로한 장기임대주택 116만가구 공급에 총 88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재원 확보과정에서 SOC 등 기타 건설예산 축소와 민간건설업체 타격 등 경제전반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건교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장기임대주택 116만가구를 신규 공급하기 위해 재정 10조 3,000억원, 국민주택기금 39조원, 주공·지방공사 자체자금 38조 6,000억원 등 총 88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에 따르면 건설부문에 나타날 첫 번째 후유증은 복지부문에 이은 임대부문의 재정 과다증액으로 인한 SOC 등 기타 건설부문 예산 축소와 이로 인한 공공물량 감소, 건설업경영 압박의 악순환이다. 특히 사업성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목표치 달성에만 치중한 현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미분양 사태로 이어져 기금과 공기업의 부실을 야기하고 예산부담을 가중시키면 중장기 SOC예산 증가는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임대주택 10만가구 신규건립 (2006. 9. 11)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0만 250가구를 연차적으로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적으로 주택을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바꾼다는 목표아래 임대주택 재고량을 30만가구, 전체 주택의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비, 시비, 주택기금 등을 포함한 12조 3,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해마다 1만 3,000~2만 1,000가구, 연평균 1만 7,000가구를 건립하기로 했다. 10만가구의 임대주택이 건립되면 기존의 11만 7,000가구, 건립중인 주택 8만 4,000가구를 포함해 서울시의 임대주택은 30만가구를 넘게돼 전체 주택의 10%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하던 임대주택의 평형을 다양화해 입주민들이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적절한 평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18평형, 26평형, 33평형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도심외곽에 건설돼 교통불편, 생활기반 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했던 임대주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심 및 부도심 역세권 등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설이적지, 소규모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직주근접형 임대주택을 건립하기로 했다. 다만 지가가 높아 임대료 상승이 예상되는 도심 및 부도심 지역에는 중소형 위주로 건립하고, 대형 평형은 지역여건 및 수요에 따라 적정하게 건립할 방침이다.

SOC예산 일반국도에 집중 배정 (2006. 9. 13)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도 SOC 투자방향을 설명하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에 따라 완공 위주로 투자하되 공사비 부족과 공기지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일반국도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잔여 사업비가 150억원 미만인 일반국도 사업의 완공을 우선 지원하되 이미 두포-천천, 아산-음봉, 보성 우회도로 등 6개 구간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국도 중에서도 간선도로, 완공했을 때 전후구간 연결 등 효율이 높은 구간,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구간을 계속비 사업으로서 정해 앞으로 5년 이내에 완공하도록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내년 한해 동안 9조 9,000억원 규모의 BTL사업을 새로 고시하되 1년간 실제 집행되는 사업은 3조 5,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장관은 “2005년부터 시작된 BTL사업이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추진되면서 내년 집행규모는 올해 1조 5,000억원보다 2조원이나 많은 3조 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예정된 8조 3,000억원 규모의 신규 고시사업은 연말까지 모두 고시를 마치고 지난해 고시한 3조 8,000억원 규모의 고시사업은 10월까지 협약체결을 마칠 방침”이라고 밝혔다.